국비 반납·도비 미회수에 '빚 눈덩이'…통합재정 '경고등'

광주·전남 재정 운용 허점

광주 국비 반납 418억·반납률 13.7%

반납액 83.9% '지역화폐 지원 351억'

통합부채도 4조 육박…3년새 52.3%↑

자체 채무·공사공단 부채 증가세 지속

전남 도비 반환금 326건·63억 미회수

재정 건전성 확보·부채 감축 대책 시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전 광주와 전남의 지난해 재정운용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 악화 요인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통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부채 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2025회계연도 광주시·전남도 결산심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수백억원대의 국고보조금 반납과 도비 반환금 미수납이 발생한 데다 부채 증가세도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옛 광주시가 지난해 국고보조금을 반납한 사업은 모두 89건이다.

광주는 국고보조금 3천62억원을 수령해 2천637억원을 집행하고 4억400만원을 이월했다.

집행잔액은 421억원으로 이 가운데 418억원을 반납했다. 국고보조금 수령액 대비 반납률은 13.7%다. 반납액 대부분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에서 발생했다. 일반지원분은 국고보조금 586억200만원 가운데 271억8천800만원을 집행하고 314억1천400만원을 반납했다. 특별지원분은 53억4천만원 가운데 16억5천600만원을 집행해 36억8천400만원을 반납했다. 두 사업의 반납액은 모두 350억9천800만원으로 전체 국고보조금 반납액의 83.9%를 차지했다.

국고보조금 반납률이 30% 이상인 사업도 11건으로 집계됐다.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는 국고보조금 2억8천550만원 전액을 반납했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은 10억원 가운데 8억원을 반납해 반납률이 80%에 달했다.

부채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 광주의 통합부채는 2022년 2조6천48억원에서 지난해 3조9천671억원으로 3년 만에 52.3% 늘어 4조원에 육박했다. 지방공사·공단 부채는 2022년 7천209억원에서 2023년 1조719억원으로 52.7% 증가한 데 이어 2024년 1조3천995억원으로 30.6% 늘었다. 지난해에는 1조5천328억원으로 증가폭이 9.5%로 둔화했지만 증가세는 이어졌다.

이에 따라 통합부채에서 공사·공단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27.0%에서 2024년 39.8%까지 높아졌다가 지난해 38.6%를 기록했다.

광주시 자체 부채 역시 지난해 2조4천343억원으로 전년보다 14.9% 증가했다.

광주의 단기 재정 유동성 지표도 악화돼 유동자산이 2021년 1조4천654억원에서 지난해 7천601억원으로 48.1% 감소했다.

반면 유동부채는 2024년 2천797억원에서 지난해 4천420억원으로 1년 만에 58% 늘었다.

옛 전남도에서는 시·군에 교부한 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지난해 도비 반환금 미수납액은 16개 실·국에 걸쳐 모두 326건, 63억5천만원에 달했다.

부서별로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이 70건, 32억4천200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51.1%를 차지했다.

보건복지국은 124건·15억8천616만원, 농축산식품국은 19건·5억3천560만원, 관광체육국은 29건·5억2천940만원 등이다. 특히 실제 수납액이 0원인 사업은 62건·8억6천만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집행잔액 8천677만원과 2024년 같은 사업 집행잔액 5천881만원 등도 전액 미수납 상태였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향후 예산편성에서는 체감형 사업에 시비를 최우선으로 배정하는 원칙을 세워 국비를 받고도 돌려보내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도비 반환금은 실·국별, 시·군별 반납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정산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공사·공단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과 연계돼 있는 만큼 통합적 관점에서 채무 관리와 상환 계획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은진 기자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페스타 2026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페스타가 14일 서울 국회에서 열려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병내 전국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 상임 공동대표 등 참석자들이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위한 협력과 상생의 공동선언'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제공〉

국회도서관 광주관 유치전…남구 입지 이견 확산

옛 보훈병원-대체 부지 놓고 입장차

정진욱 등 보훈병원 유치추진위 출범

남구, 매입비 부담에 송암공원 등 검토

국회도서관 광주관 유치를 놓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내부에서 건립 후보지를 둘러싼 이견이 확산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유치추진위원회는 옛 보훈병원 부지를 최적지로 내세우고 있지만, 남구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대체 부지를 검토하면서 입장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국회도서관 광주관 남구 (구)보훈병원부지 유치추진위원회'는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옛 보훈병원 부지에 국회도서관 광주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진위에는 정진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동남갑)을 비롯해 남구 주민, 정계·학계·노동계·문화예술계·종교계·시민사회 인사 등 2천여명이 참여했다.

앞서 남구는 국회도서관 광주관 후보지로 기존에 거론돼 온 옛 보훈병원 부지 대신 노대동 836 일원과 송하동 산16-1 송암근린공원 일원 등을 검토해왔다. 옛 보훈병원 부지의 재산가치가 1천억원 상당인 데 비해 국회사무처가 검토하는 토지보상비는 약 50억원 수준이어서 재정난을 겪는 남구가 구유재산을 국책사업 부지로 제공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남구의회에서도 송암근린공원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영순 남구의원은 최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옛 보훈병원 부지는 매각해 재정 정상화에 활용하고 국회도서관은 송암근린공원에 유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정 의원과 추진위는 남구가 옛 보훈병원 외에 다른 후보지를 검토하는 데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광주 내 여러 지역이 국회도서관 유치에 나서고 있는 만큼 남구가 입지 경쟁력이 가장 높은 후보지를 내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진위는 "현재 광주의 몇 개 지역에서 유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곳이 아니면 어느 곳도 유치를 낙관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옛 보훈병원 부지는 국회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바라는 조건도 모두 충족하는 가장 완벽한 최적의 입지"라고 주장했다. 특히 남구의 대체 부지 검토를 겨냥해 "옛 보훈병원 부지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입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로 인해 국회도서관 광주관 남구 유치가 무산될 경우 그 책임을 져야 함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날 출범을 시작으로 범시민 1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국회와 정부 부처를 상대로 정책 건의와 여론 조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국회도서관 광주관을 놓고 북구 옛 광주교도소와 중외공원 인근 등 광주 내 여러 지역이 유치전에 나선 상황에서 남구는 외부 경쟁에 앞서 내부 입지부터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옛 보훈병원 부지를 고수하는 지역 정치권·추진위와 대체 부지를 검토하는 남구 간 입장 차가 향후 유치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변은진 기자

광주 자원회수시설 입지공모에 9곳 신청

서구 2·남구 1·북구 1·광산구 5곳

자치구 검토 거쳐 내달 13일 제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4일 "광주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후보지 공모와 관련해 자치구별로 신청을 받은 결과, 총 9곳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자치구별로는 서구 2곳, 남구 1곳, 북구 1곳, 광산구 5곳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오는 10월12일까지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5개 자치구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개인·법인·단체 등의 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 신청을 받았다.

각 자치구는 신청부지에 대한 현지 여건, 주민동의 여부, 관련 법규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10월13일까지 신청서를 특별시에 제출한다.

이후 입지선정위원회는 제출된 입지후보지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 후보지를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현재 자치구에서 신청부지를 대상으로 부지 여건과 주민 동의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며 현장 조사와 검증을 강화하고 있는 단계"라며 "신청부지에 대한 검토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구에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시는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권역별 주민설명회 추진 및 홍보물 배포, 영상 송출 등 자치구와 함께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변은진 기자